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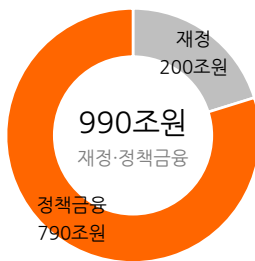
ESG

나라가 돈을 대는 녹색대전환, 업종 지도

Analyst 박세연 shannon@hanwha.com 3772-7406

[주요 데이터 및 차트]

K-GX 10년 재원 → 990조원이 재정·정책금융



주: 2026~2035년. 정책금융은 5대 정책금융기관의 기후금융
자료: 관계부처 합동,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K-GX 는 재정·정책금융으로 녹색산업의 수요와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전략입니다.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정책의 총규모보다 기업 실적으로 이어지는 조건입니다. ESS-전력기기는 입찰 물량과 발주 일정이 주주 기회를, 태양광·풍력·이차전지는 세액공제 대상과 적용 요건이 국내 생산의 수익성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다배출 업종은 감축 투자 부담과 전환금융 지원 조건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990조원은 재정과 정책금융기관의 기후금융

재정 200조원에 정책금융기관의 기후금융 790조원. 정부가 녹색산업 투자를 유도하여 자본의 방향을 정하는 한국판 국가자본주의에 가까움. 일본은 민간 투자 150조원을 목표로 하고 정부 몫(GX채권 20조원)을 따로 밝혔지만, 우리나라는 「정부투자」 항목으로 1,000조원(재정 200조원+기후금융 790조원+ α)을 잡음. 시그니처 프로젝트(220조원 규모)는 기업과 지역까지 제시 [표1·그림2]

수요를 확보하는 업종 : ESS-전력기기

ESS-전력기기는 정부·공기업의 입찰 물량과 발주 일정이 중요한 업종. ESS는 중앙계약시장을 해마다 열고(3차 1,180MW), 한전은 2038년까지 송·변·배전 설비 확충할 계획. 재생에너지 경쟁입찰 세부안은 2027년 1월에 마련할 예정[그림1]

세액공제로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업종

핵심은 2027년 1분기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태양광 셀·모듈은 2026년 하반기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되면 공급망안정화자금의 용자보증도 받을 수 있음. 수혜 폭은 시행령에서 정할 기준공제액과 대상 품목에 따라 달라짐[그림5]

감축 투자와 전환 지원을 함께 살펴야 하는 업종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 등은 감축 투자 부담과 전환 지원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업종. 다만 산업의 2035년 감축률(2018년 대비 24.3~31.0%)은 수송(60.2~62.8%)·에너지(68.8~75.3%)보다 크게 낮음[그림3]. 업종별 감축 속도는 2026년 말 나올 업종별 GX 로드맵에서 구체화될 예정[그림5]

[그림1] 업종 지도 → 정책 수단에 따라 주요 확인 일정은 다음

주요 정책 수단	업종	주요 확인 일정
입찰·발주로 수요를 확보하는 업종 입찰·조달·한전 발주	ESS·재생에너지 발전·전력기기·전선·SMR	진행 중 ESS 3차 입찰 2026년 11월 11일 마감 한전 송·변·배전 확충: 2038년까지
국내 생산에 대한 세제 지원 국내생산세액공제	태양광 셀·모듈·풍력 기자재·이차전지	2027년 1분기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추진
감축·전환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 감축 목표·인증·조달·전환금융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	2026년 말 업종별 GX 로드맵 발표 예정

주: K-GX 전략의 주요 업종을 정책 수단별로 재분류. 업종별 정책 수단은 중복될 수 있으며, 제시된 일정은 정책상 추진 계획 기준. 전기차·전력반도체·히트펌프·수소·CCUS는 이번 지도의 분석 범위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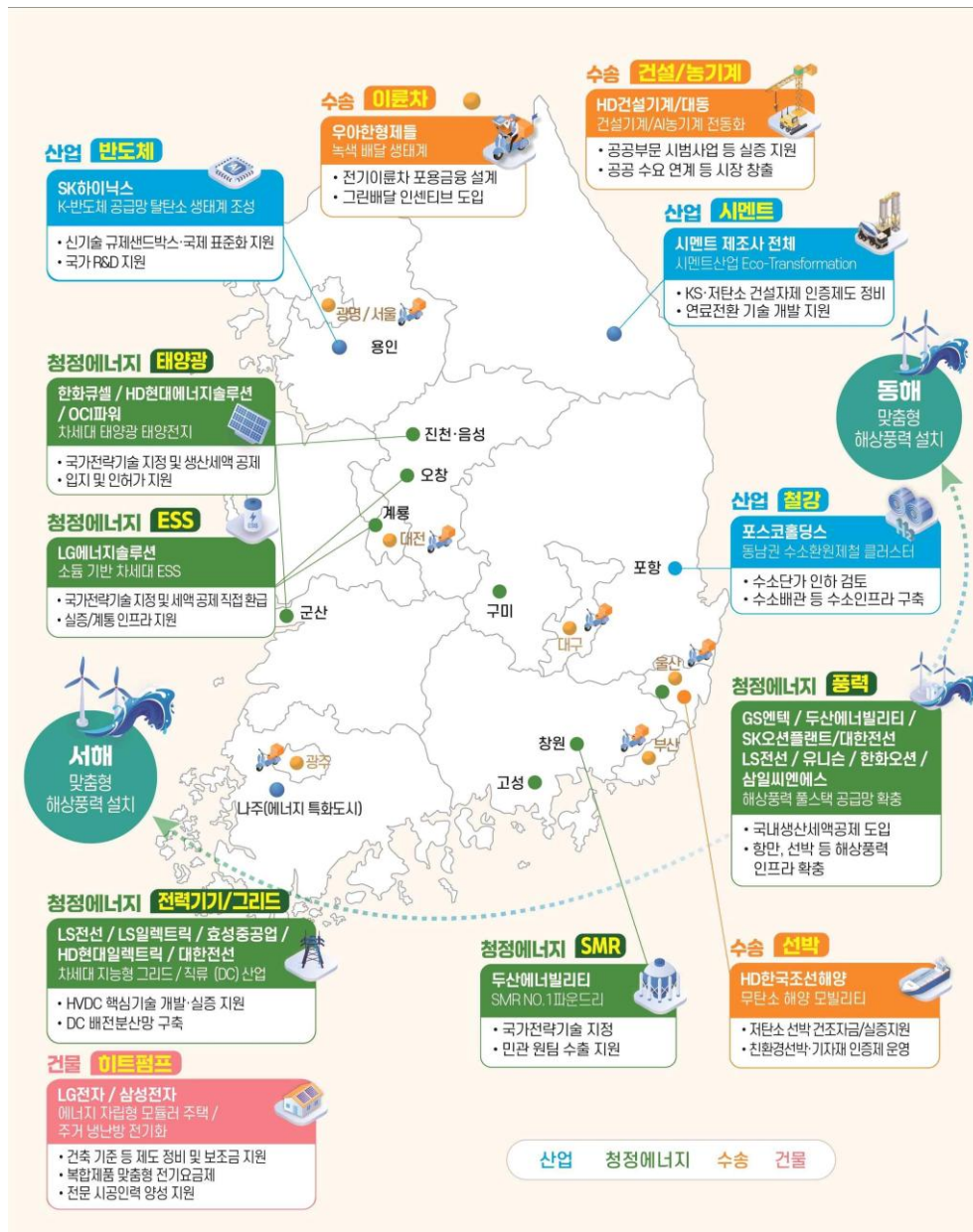
자료: 관계부처 합동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2026.10.7), 기후에너지환경부,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1] 업종별 과제와 시그니처 기업 → 지도에 기업이 가장 많이 적힌 업종은 풍력(8 개사)·전력기기(5 개사)

업종	K-GX 과제와 시점	정부 수단	시그니처 프로젝트 기업
① 입찰·발주와 생산기반 지원			
ESS	중앙계약시장 매년 운영. 3차 공고 물량 1,180MW, 2026년 11월 11일 입찰 마감	입찰	LG 에너지솔루션·한국수력원자력
재생에너지 발전	2030년 설비용량 100GW 목표. REC·현물시장 폐지 및 경쟁입찰을 통한 고정가격 입찰로 일원화 추진(2027년 1월 세부안 마련)	입찰	-
전력기기·전선	송·변·배전 설비 확충(~2038년), GW 급 HVDC 해저케이블 국산화(~2029년)	한전 발주·실증	LS 전선·LS ELECTRIC·효성중공업·HD 현대일렉트릭·대한전선
SMR	i-SMR 1호기 도입(~2035), 국가전략기술 지정 추진	공기업 발주·세제	두산에너지빌리티
② 국내 생산에 대한 세제 지원			
태양광 셀·모듈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추진(2027년 1분기), 경제안보품목 지정 추진(2026년 하반기)	세액공제·기금 융자·보증	한화큐셀·HD 현대에너지솔루션·OCI 파워
풍력 기자재	국내생산세액공제, 해상풍력 지원항만 5곳 추가	세액공제·인프라	두산에너지빌리티·LS 전선·GS 엔텍·한화오션·유니스 등
이차전지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추진, 배터리 삼각벨트 조성	세액공제	위 ESS 쇼츠(10/12) 참조
③ 감축·전환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			
철강	수소환원제철 실증(~2030년)·상용화(2037년부터) 추진, 저탄소 철강 인증제 시행 추진(2027년)	인증·조달·전환금융	POSCO 홀딩스
석유화학·정유	석유화학: 바이오·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 10% 목표(2035년). 정유: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률 1%(2027년)→7~10%(2035년)	원료 기준·전환금융	-
시멘트	혼합시멘트 생산 비율 16%(2025년)→40%(2035년 목표), 공공조달 기준 마련 검토	인증·조달	시멘트 제조사 전체
반도체·디스플레이	저온산화 공정가스 실증(~2035년)·상용화(2040년부터) 추진, 고효율 저감장비 상용화(~2035년)	연구개발 지원	SK 하이닉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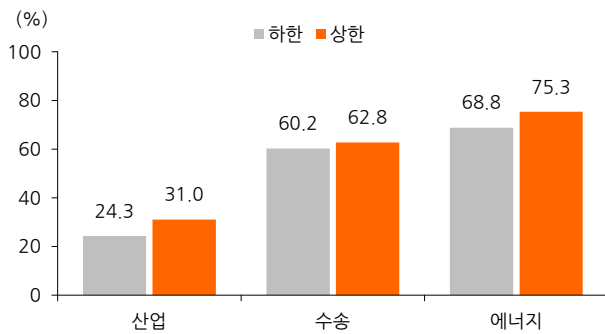
자료: 관계부처 합동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2026.10.7), 기후에너지환경부,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 지도 → 업종별 주요 기업과 사업 지역 제시



자료: 관계부처 합동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참고자료(2026.10.7),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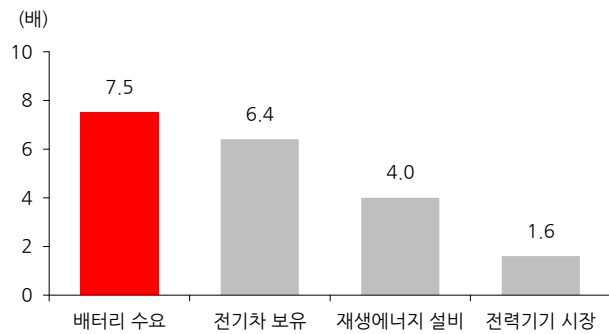
[그림3] 2035년 부문별 감축률 → 산업, 수송·에너지보다 낮음



주: 2018년 대비 2035년 감축률로, 두 경로의 하한·상한 표시. 2024년 전체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산업 38.4%, 에너지 33.5%, 수송 14.9%

자료: 관계부처 합동,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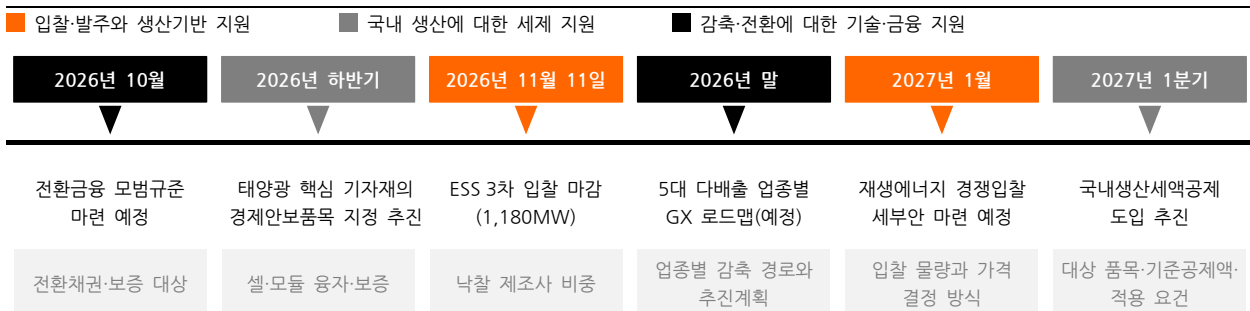
[그림4] 2035년 전망 배수 → 배터리 7.5배, 전력기기 1.6배



주: 배수는 각 지표의 2035년 전망치를 기준값으로 나눠 계산. 기준연도는 배터리 수요 (TWh)·전기차 보유 대수 2025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TW) 2024년, 전력기기 시장 규모(달러) 2026년. 배터리 수요는 IEA 넷제로 시나리오의 최대 전망치 기준. 전력기기는 K-GX 요약본의 0.8조 달러→1.3조 달러를 사용

자료: IEA·McKinsey 전망, 관계부처 합동,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주요 정책 일정 → 2026년 말 업종별 로드맵·2027년 1분기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추진



주: K-GX 전략에 추진 시점이 제시된 과제와 ESS 입찰 일정을 정리. 회색 상자는 향후 확인 사항. 이 밖에 녹색국채 세부방안은 2027년 상반기, SAF 혼합률 1%-저탄소 철강 인증제·전기차 보조금의 지역별 차등은 2027년 추진 과제

자료: 관계부처 합동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2026.10.7), 기후에너지환경부, 언론보도,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공표일: 2026년 10월 12일)

이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됐음을 확인합니다. 당사는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과 관련해 공표일 현재 관련 법규상 알려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이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박세연)

저희 회사는 공표일 현재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